

여가부·경찰, 스토킹 핫라인 구축?

국회 여가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현안보고' 여가부 "발생 초기부터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경찰청은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점검을 위한 현안보고'에서 여가부-경찰청간 핫라인을 구축해 스토킹 피해신고 단계부터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스토킹 발생 초기부터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에서 경찰청은 해당 대책을 모르고 있었다.

전주해 국민회의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계가 중요한데,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일단 움직여야 여가부나 직장에서 아는 것 아니냐"고 묻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지금 여가부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무슨 실시간으로 연계시스템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피해자를 조사하면 구두와 서면으로 여가부가 운영하는 여러 연계시스템과 시민단체, 여성의 전화, 법원에서 민사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안보고가 종료된 후 우 차장은 '여가부와 핫라인 구축을 협의했냐'는 뉴시스 질문에 손을 저으며 "여가부



에 물으라"고 답했다.

김현숙 장관도 '경찰청 협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논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아직 논의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긴급현안보고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을 보고했다. 김재환기자



광주 동부소방, 낙하위험 아파트 방음벽 안전조치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 19일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뒤편에서 유리로 된 방음벽이 낙하할 위태로운 상황에 굴절차 등 소방차량 5대를 동원해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슬비기자



무안소방,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무안소방서(서장 박익승)는 10월 31일까지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119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여수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독거노인 등 대민 지원 서비스

여수소방서(이달승)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주상동 월암마을 일대를 방문하여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 세대 등 재난 취약계층 8가구를 방문,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및 화기사설 소방안전점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약산 득암항 일대 활동 전개

완도소방서(서장 김옥연)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약산면 득암리 방문하여 생활안전서비스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 홍보 강화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응급처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장흥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취약계층 생활안전 서비스

장흥소방서(서장 신항식)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의용소방터와 함께 19일 장흥군 용산면 척산마을을 찾아 재난 취약가구의 화재 예방 및 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생활안전 서비스를 펼쳤다. 장흥=김도영기자

규제 강화 1년...광주·전남 전동킵보드 법규 위반 9992건

2021년 5월 이후 범칙금 2억 6743만 원 부과

전동 킵보드 이용 규제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 간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사태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금 부과액도 2억 원을 훌쩍 넘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킵보드 규제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간(2021년 5월~올해 6월)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9992건이다. 범칙금 부과액은 2억 6743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광주 9270건(범칙금 2억 3942만원), 전남 722건(280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년간 전동 킵보드 법규위반 건수 13만 6221건이 적발, 범칙금 43억여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65%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유형 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10만 6451건 ▲무면허 운전 1만3809건 ▲음주운전 5753건 ▲기타 9380건 ▲승차 정원 위반 828건 순이었다.

조 의원은 "짧은 이동거리를 오갈 때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전동 킵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돼야 한다"며 "특히 심야시간대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연쇄사고 위험성이 더욱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자들 개개인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검은 추모 리본 패용한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에서 검정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30일까지를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추모 주간으로 지정, 전 직원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패용하고 근무한다.



"출항 신고 목소리에 술냄새가..." 만취 운항 40대 선장 입건 조사

0.138% 만취 상태

완도 해상에서 술이 덜 깬 채 선박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연안복합어선 선장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 40분께 완도군 군외면 고마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8%인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경에 "출항 전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전화 출항 신고를 접수하는 선장 A씨의 말투와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여겨 현장에 출동,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숙취·음주 운항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여겨지면 선박 운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사안전법상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0.08%~0.20% ▲0.20%이상 등 3단계로 나뉘어 적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서선욱기자

하교 후 대전 간 광주 여중생 두 달째 소식 없어

휴대전화·가방은 학교서 발견...대전서 택시 탑승 후 행방 끊겨

광주에 사는 여중생이 방과 후 대전으로 향한 뒤 두 달째 행방을 알 수 없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오후 5시 40분께 '광주 모중학교'에 다니는 딸 A양이 하교 시간 인데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가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교복 차림의 A양이 신고 접수 2시간 전인 오후 3시 30분께 학교에서 광주종합버스터

미널로 향한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께 고속버스에 탑승, 3시간여 뒤 대전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곧잘 터미널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이후 A양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경찰은 터미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A양이 탑승한 택시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책상에서는 휴대전화, 학교

정문 인근에서는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양이 가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종 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A양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범죄 수사)을 의뢰했다.

경찰은 "대전 도착 이후 A양의 행적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단순 가출과 범죄 연루 가능성 등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